

브리핑: 물가 억제와 실질소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부제: 물가상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11.4.25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물가상승으로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다.
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3. 수입물가 상승은 왜 발생하는가.
4. 수입 물가상승 억제의 주요 수단, 환율
5. 지금은 물가 억제와 동시에 실질임금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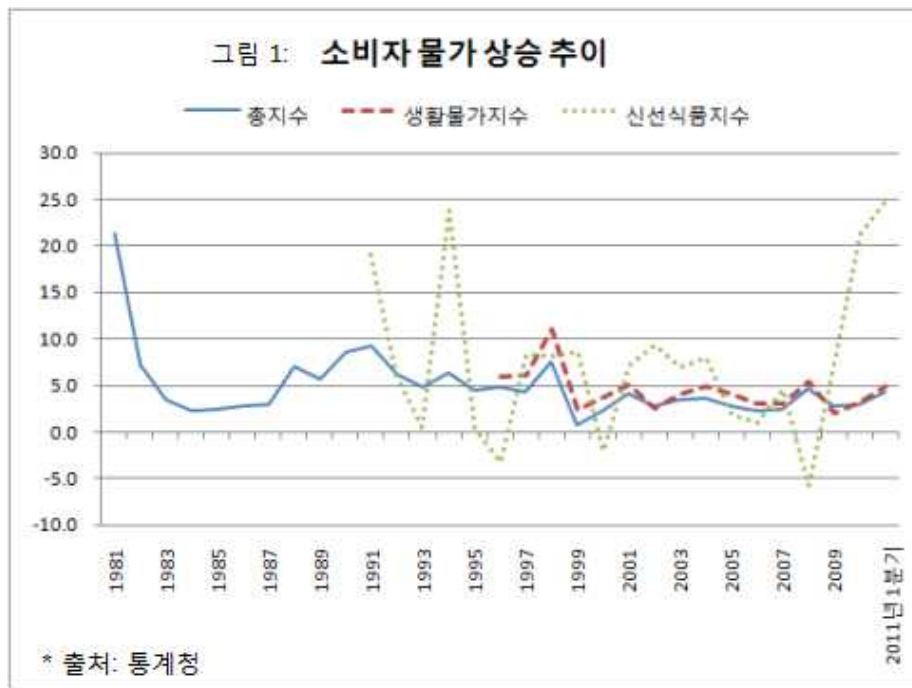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1. 물가상승으로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다.

지난해 국민경제 성장률이 6.2%에 달하고 수출이 30%이상 늘어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왔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나아진 것이 없어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표경기 호전과는 달리 회복되지 않는 체감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물가상승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때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었던 저물가 국면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9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를 넘어서더니 올해에는 1월 4.1%, 2월 4.5%, 3월 4.7%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제 1목표로 한 한국은행이 설정한 목표 3±1%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급기야 최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치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전망치 3.5%보다 0.4% 높아진 3.9%로 전망하게 되었고 정부도 향후 기존 경제전망치 5%성장- 3%물가상승률을 4%성장-4%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선식품 등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의 경우 무려 21%나 폭등하고 올해 1분기에는 24.8%로 더욱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다가 농축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14.7%인상, 석유류의 경우는 15.3%가 오르는 등 주요 생활물가들이 이미 10%씩

을 넘어서면서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4%물가와는 다른 체감물가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1분기 전세가격 상승은 여기에 부담을 더 얹은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안보이자 정부 일각에서도 그간의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급한 대로 당장 정유사에 대한 압박을 통해 석유가격을 임시로 100원 정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이 조처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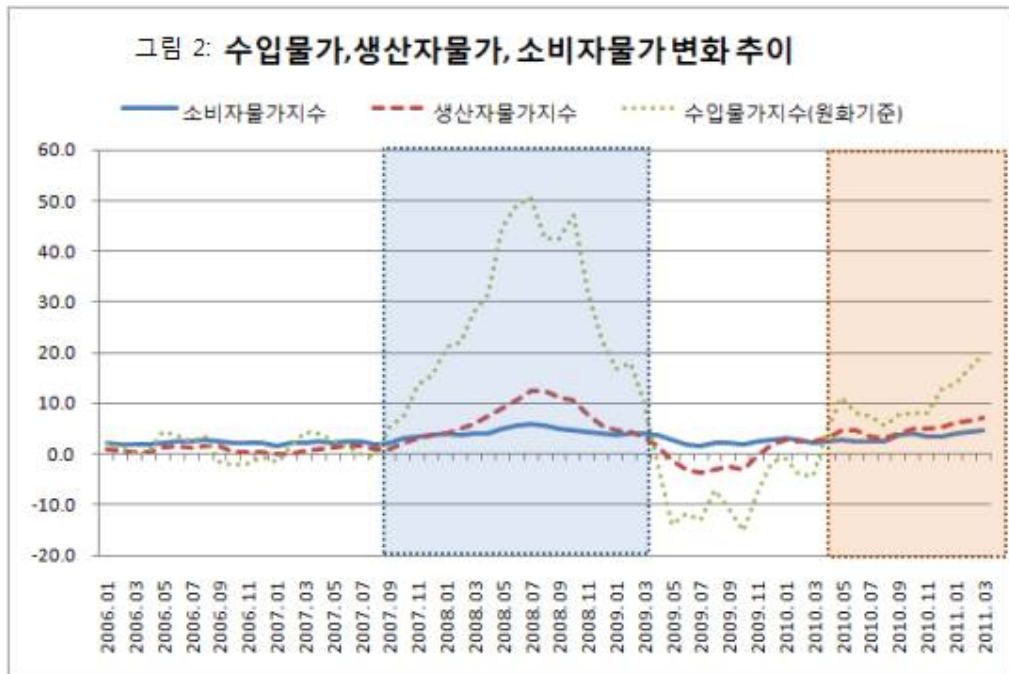
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심지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로는 국내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되고 경기회복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둘째로는 국제적인 달러가치 하락과 석유나 곡물 등의 불안정한 상품공급이 각국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물가상승은 국내적인 과열경기나 유동성 측면 보다는 일단 해외수입물가 상승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측면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동성 과잉 측면이 없다는 말은 아니며 향후 이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인다.

어쨌든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초 미국에서부터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두 번의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08년 7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 이상 치솟았던 시점을 정점으로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가격이 폭등했던 시점이었다. 당시 소비자 물가가 한 때 5%를 넘어서기도 했고 한해 평균으로는 2000년대 이래 가장 높은 4.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상황은 그 해 9월 리먼 사태가 터지고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국면에 돌입하면서 완화되었다.

두 번째 시점이 바로 2010년 9월 이후 역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가격의 급등이 시작되고 전반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이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이다. 2008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원화표시 수입물가가 내려가고 있어 완충이 되고 있지만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경기 과열과 5%를 넘어서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중국산 소비품과 중간재 수입경로를 타고 한국경제와 국민생활을 추가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우선 한 때 145달러 이상까지 치솟았던 원유 가격이 2008년 말에는 4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상승 추세가 빨라지면서 올해 100달러를 재 돌파했다. 여기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동사태는 유가 하락 가능성에 췌기를 막고 있다. 철광석 가격도 지난 1년 동안 34.8%가 오르는 등 광산물 가격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과 동반 상승을 해 왔던 곡물가격 역시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30%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밀, 옥수수, 콩 등의 주요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민 생활과 기업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가격의 급등이 소비자 물가를 주도하면서 물가상승이 공식적인 상승률 4.7% 이상의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대두, 밀,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Korea PDS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세계 곡물 수급



자료: USDA (2011. 1.), World and U.S Supply and Use for Grains 1/ (WASDE-490-8).

결국,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곡물가격의 이 같은 상승은 한 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수입 물가를 일거에 10%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2011년 3월에는 19.6%(원화 기준, 계약 통화기준 20.5%)까지 급상승시키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물과 광산물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은 35.8%까지 올라갔다.

수입물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었고 생산자 물가는 2011년 1월 6%를 넘어선 후 3월에는 7.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 물가 가운데 농림수산물은 16.2%, 공산품은 9.1%, 서비스 가격은 2.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 수입물가 상승은 왜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최근 수입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 등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나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우려, 또는 중국과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원자재와 곡물 수입수요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이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변동이라기보다는 중,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가격 폭등은 단순한 수요 공급으로만 설명

하기 어렵고 세계경제 변동과 관련되어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선 2010년 8월 말 미국 연준(Fed)의 양적완화 발표 이후 11월부터 실제 시행해 들어가서 올해 6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6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의 달러 공급이 달러 가치 하락을 초래했고, 달러 표시 원자재와 곡물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취해진 양적완화와 달러 공급이 미국 국경선을 넘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한편으로는 아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가속화시켜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편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글로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원유 비상업용 순매수



이와 함께 2008년 원자재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국제 금융자본의 상품시장 투기가 이번에도 일정하게 재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유 선물시장에서의 실수요가 아닌 원유 순매수가 2010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원유 가격변동이 상당정도 비상업용 원유 순매수 흐름과 동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4~15일 개최된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이 원자재 파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요청하기로 한 바가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국제원자재 시장이 투기 세력에 의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G20 국가들이 공감하면서 우선 파생시장에서 투기세력들이 과도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높아지는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 성장위주 정책보다 안정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고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 환율관리와 금리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아도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물가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원화가치를 절상시키고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은 효과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림 6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 이상으로 원화표시 수입물가가 높았다. 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증폭되었다는 얘기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평균적으로 환율이 다소 하락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완충해주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이전인 2007년까지에 비해 여전히 환율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 차원에서 환율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 왔다면 지금부터는 물가 안정을 기준으로 삼아 환율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5. 지금은 물가 억제와 동시에 실질임금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환율관리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억제해야 하지만,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추이를 비추어볼 때 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환율하락이나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기변동시기에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글로벌 경기 불안정성으로 인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정한 수준의 물가 억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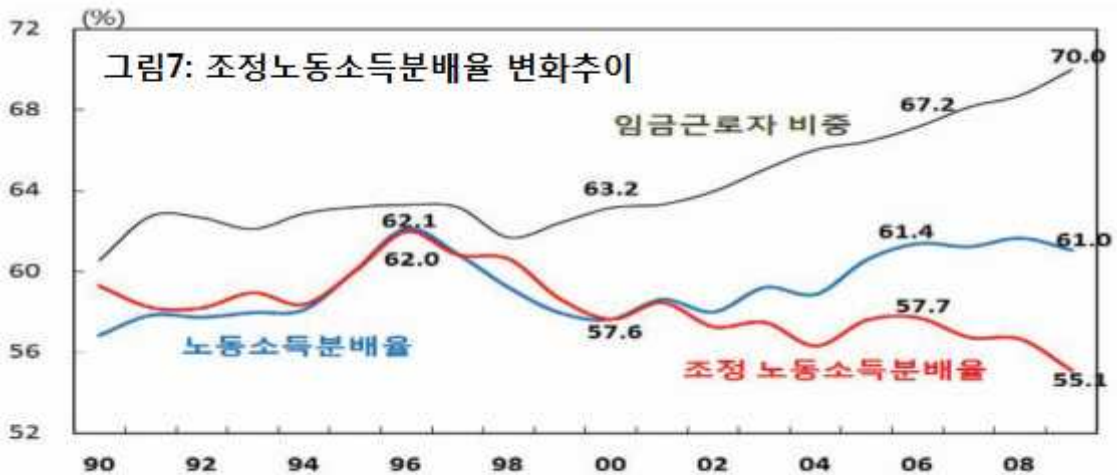
물가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물가 충격을 주로 누가 흡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물가 충격은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충격을 일부 흡수하겠다는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 수입관세 인하나 유류세 인하 등이다. 정부는 대기업에게도 일부 충격을 흡수하라는 정유사들에게 일시적인 가격 인하를 종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물가 충격은 소비자인 국민들과 원가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여기서 왜 소비자인 국민들이 물가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앞서 확인한 것처럼, OECD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6.2%를 달성하면서 기업실적은 급격히 개선되었지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소득은 지난 3

년 동안 사실상 정체 상태를 면치 못했다는 점은 국민들의 물가압력을 크게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노동자와 국민들의 소득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심지어 명목임금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밀돌기조차 하였고, 3년 평균 실질임금인상률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공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집단 55개 그룹의 지난해 평균 순이익은 약 78조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68%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임금인상률은 그의 1/1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그림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임금 근로자 증가를 감안한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분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인 2010년 노동소득분배율은 59.2% 전년보다 1.7%가 하락한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71.2%로 1.2%가 증가했으므로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은 52.5%로 추락하게 되었다.



주: 1)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 ÷ (해당년도 임금근로자수 비중 ÷ 2000년 임금근로자수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추락과 미약한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때, 올해는 ‘실질임금, 실질 소득’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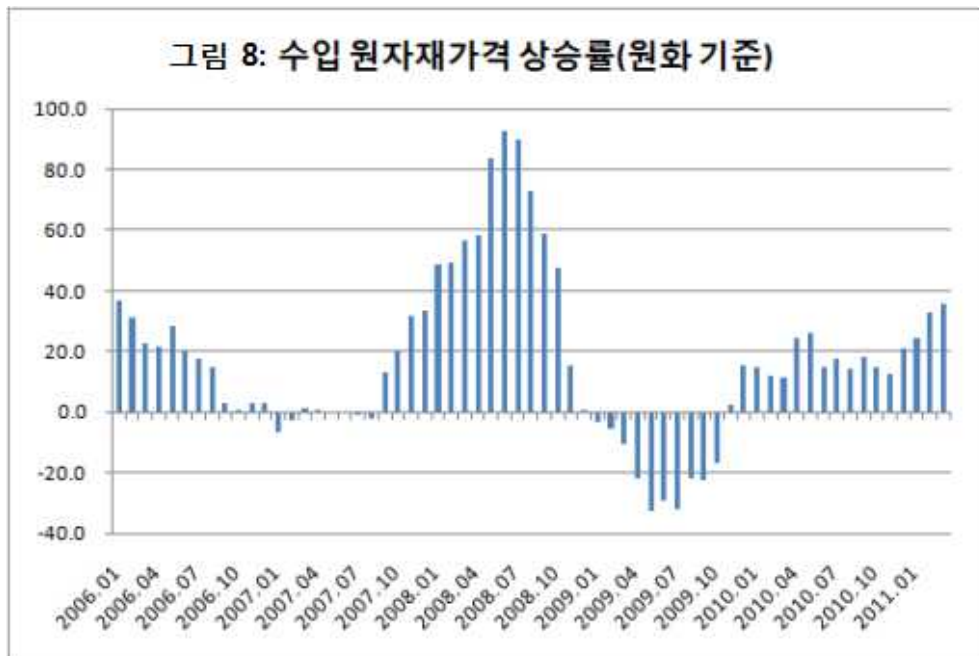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적으로 10%를 밀돌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더욱 내려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임금인상률이 곧바로 비슷한 수준의 물가상승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대기업의 경우 임금인상률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익률 여력이 있는 만큼 곧바로 상품가격 인상으로 전이시키는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실질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고환율 유지를 대가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일정하게 물가상승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개선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올해는 지난해 기준 6.2%의 실질성장률과 4%대의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감안한 실질임금 개선과 실질소득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국민들이 상승하는 물가에 대한 대처능력과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물가상승은 생필품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쳐 고소득 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충격이 더 크다는 연구(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계층별 체감물가 괴리”, 2011.4)도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크게 현실화시켜주어야 하는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납품가격 문제다. 그림 8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입원자재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환율 하락으로 다소 충격이 흡수되기는 했으나 2011년 2월 이후 30%를 웃돌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기업의 수익개선은 곧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개선의 기반 환경이 되므로 ‘납품가 원자재 가격



연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2011년 4월 20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물가 토론회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약한 것입니다.(참여 토론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지원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실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